

해외 3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분석을 위한 출장보고서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

1. 출장 배경과 목적

- (배경) 2012년 12월 이후,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인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선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사례분석이 필요
 - 한국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7개월간 약 1,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난립과 부실의 우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
 - 협동조합이 향후 건전한 사회적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연구가 필요
- (목적)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협동조합 생태계 구성 요인들에 대한 정책사례에 대한 검증이 요구
 - 협동조합 주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3년 4월 '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을 실태조사'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게 위탁
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의 워크숍, 협동조합전문가 대상 FGI, 해외정책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가안을 작성한 상황
 - 본 출장은 작성된 기본계획 가안에 포함된 각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협동조합육성 지원기관, 금융지원 시스템 등 해외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계획됨

2. 출장 대상국과 내용

- (대상)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영국과 프랑스,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및 협동조합 정책관련 부처와 지원기관,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
 - 출장계획 초기, 출장대상국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이탈리아가 포함되었으나 현지 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이번 출장에서는 제외됨
 - 협동조합 정책관련 부처는 영국 제3섹터청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국의 사회적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진행됨
 - ⇒ 이외 방문국의 협동조합 및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증은 스웨덴 남스톡홀름 최연혁교수, 영국 런던정경대 Robin Muray교수, 벨기에 리에

주대 박사과정인 엄형식선생(프랑스) 등 해당국 연구자를 통해 확인함
 ·협동조합 및 사회서비스 육성 지원기관은 스웨덴의 Coompanion, 영국의
 Locality와 CommuintyLink, 프랑스의 GSCoop과 SOS Group이 대상

< 방문기관 및 전문가 >

일시		일정	비고
6.9(일)	9:15	인천 출발	- AF267
	20:20	스톡홀름 도착	
6.10(월)	10:00	최연혁 교수 전문가 간담회	-활동내용: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 논의
	14:00	지역협동조합개발기구(Coompanion)	-담당자: Mr. JanForslund -활동내용: 협동조합 지원 방안, 운영재정 논의
6.11(화)	11:10	영국으로 이동	- SK531
	12:50	런던 도착	
	16:00	지역개발기구(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) LOCALITY	-담당자: Stephen Rolph -활동내용: 민간단체의 지역개발 방안 논의
6.12(수)	오전	DR. Robin Murray 전문가 간담회	-활동내용:영국 협동조합의 현재를 심층분석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중간지원조직/교육 등에 관한 정책방향논의
	오후	시민사회청 (the Office for Civil Society, specifically on Social Impact Bonds)	-담당자: Tim /Ross -활동내용:사회적경제단체 금융정책 방안 논의 및 자료 수집
		커뮤니티링크 (Community Link)	-담당자: Geraldine Blake -활동내용: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지원 방안 논의 및 자료 수집
6.13(목)	10:25	프랑스로 이동	-유로스타
	오후	엄형식 박사 전문가 간담회	-담당자: 엄형식 박사 -활동내용: 프랑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정책 논의
6.14(금)	오전	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(CGSCOP)	-담당자: Lionel Orsi -활동내용: 노동자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논의
	오후	SOS그룹	-담당자: Romain Buquet -활동내용: 5대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 및 비전 논의
6.15(토)	13:35	파리 출발	- AF264
6.16(일)	07:05	인천 도착	

- (출장자)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4인,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국 공무원 2명,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국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
 -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동조합 정책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계된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
 - 연구진은 협동조합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사업모델 분석에 주력함

< 출장자 >

소 속	출장자
한국보건사회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위원 이철선(과제책임자) - 연구위원 김태완(협동조합 금융시스템 담당) - 연구위원 박세경(사회서비스 정책분석 담당) - 연구원 권소일
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동조합 정책과장 서기관 강완구 - 협동조합 운영담당 사무관 이정윤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서비스 사업과장 서기관 지승훈 - 사회서비스 사업담당 사무관 신은하

- (검증내용)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각국의 시장 정책과 중간지원기관의 구축방향, 그리고 중간지원기관들의 사업모델 3가지에 주목
 - 첫째, 사회서비스 시장정책은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자생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을 부여했는지를 검증하는데 주력
 - 둘째, 중간지원기관 구축방향은 민간주도와 정부주도의 협동조합 중간기관 구축방향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
 - 셋째, 중간지원기관 등의 사업모델 분석은 향후 구축될 한국의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에 포함하기 위함임
 - 이외, 출장내용에는 금융시스템 구축과 교육체계, 최근 이슈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파악 등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졌음

3. 해외 3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

- (정책방향) 일반협동조합은 시장의 주체로써 평등성을,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 사회서비스의 전달기관으로써 육성
 - (스웨덴) 일반협동조합 중 생협은 생성초기부터 시장경제의 역할을 담당한 반면,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의 적극적 복지정책에 따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돌봄 등 일부 사회서비스를 위탁
 - (영국) 일반협동조합의 경우, 생협의 자생적 경제활동을 촉진한 대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자에게 이익을 부여한 공동체이익회사 등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형태로 활성화
 - (프랑스) 1800년대 후반부터 장인 등 소상공인 중심의 일반협동조합을 육성하고,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 확대로 비영리단체들이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청소, 먹거리 등 비대인 근린서비스 시장에서 공익협동조합을 육성

< 3개국의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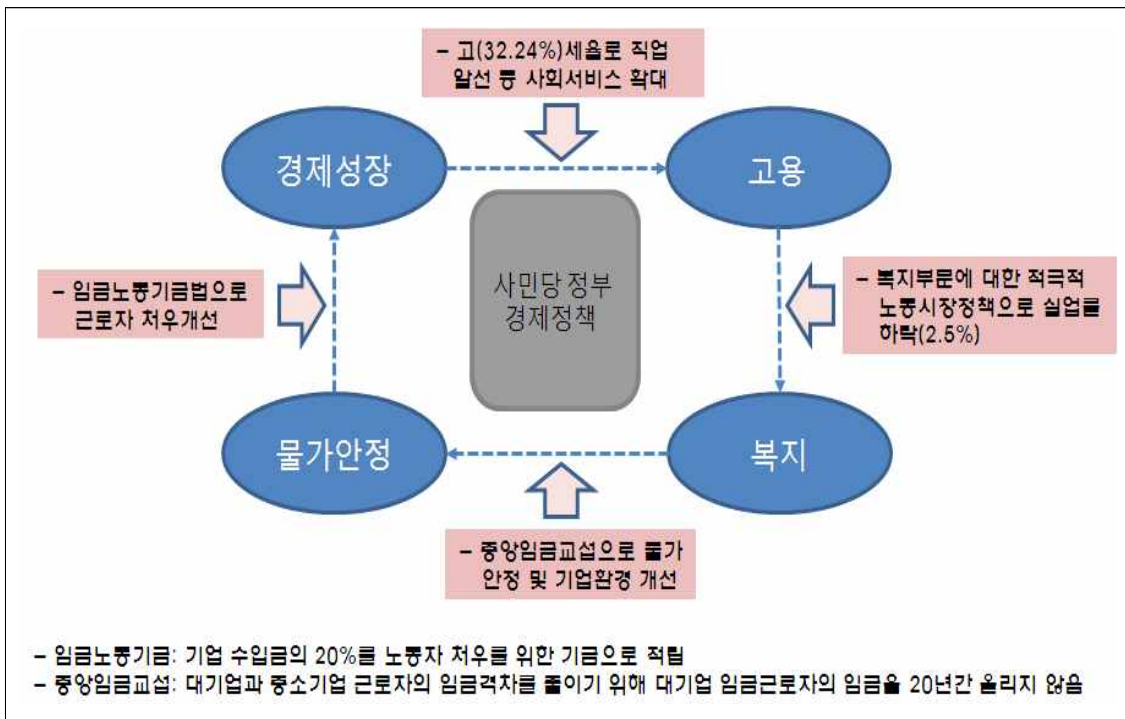
구 분	일반협동조합	사회적 협동조합
스웨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매 유통, 주택 등에서 일반협동조합이 성장 ·소비자 생협의 시장점유율 약 40% ·최근 문화 등 협동조합이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지부문 중 아동, 노인, 약물중독자 대상 돌봄 영역을 위탁 ·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부문 재정 압박과 소비자 선택권 충족으로 협동조합이 다시 부상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기업과의 차별성 철폐 및 혜택 무 ·소비자 생협 중심의 협동조합 발달 ·생협의 유통 점유율 8.8% 수준 ·협동조합은 상법성 일반기업으로 대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위탁사업 담당 ·지방정부내 사회서비스 위탁 ·지방정부 자산의 이전을 통한 위탁 ·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890년부터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 주체로 육성 ·EU 통합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세 등 세금면제 정책 추진 ·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형 관리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에서 비대인서비스인 근린 서비스 개발·위탁사업자로 활성화 ·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공공시장의 확대로 비영리단체 등 민영화가 완료 ·사회적 기업은 고용훈련에 집중

4.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델

□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

- (개관)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보수당이 집권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위탁기관으로써 협동조합이 부각
- (기존정책) 91년 이전 사민당 정부는 복지부문의 적극적 고용정책과 임금교섭을 통한 물가안정, 高세률을 통한 사회간접자본투자로 경제성장을 추구

< 스웨덴 경제 정책 시스템 >



- (전환배경) 91년 국제유가 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보수당 정권이 집권한 후, 돌봄 등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서비스가 재편
- (특징) 사회적 경제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비영리형 활성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틈새시장을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정책시행
- (과정) 시범사업으로 협동조합 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(쿠파니언)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공모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육성

- ⇒ 국민 중 부유한 소비자들의 고품질 육아육구 충족을 위해 부모들이 참여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
- (이슈화) 영리기업들의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매출성장률 한도 설정(5%) 등이 이슈화되면서 위탁기관으로서 협동조합에 위상 강화 움직임이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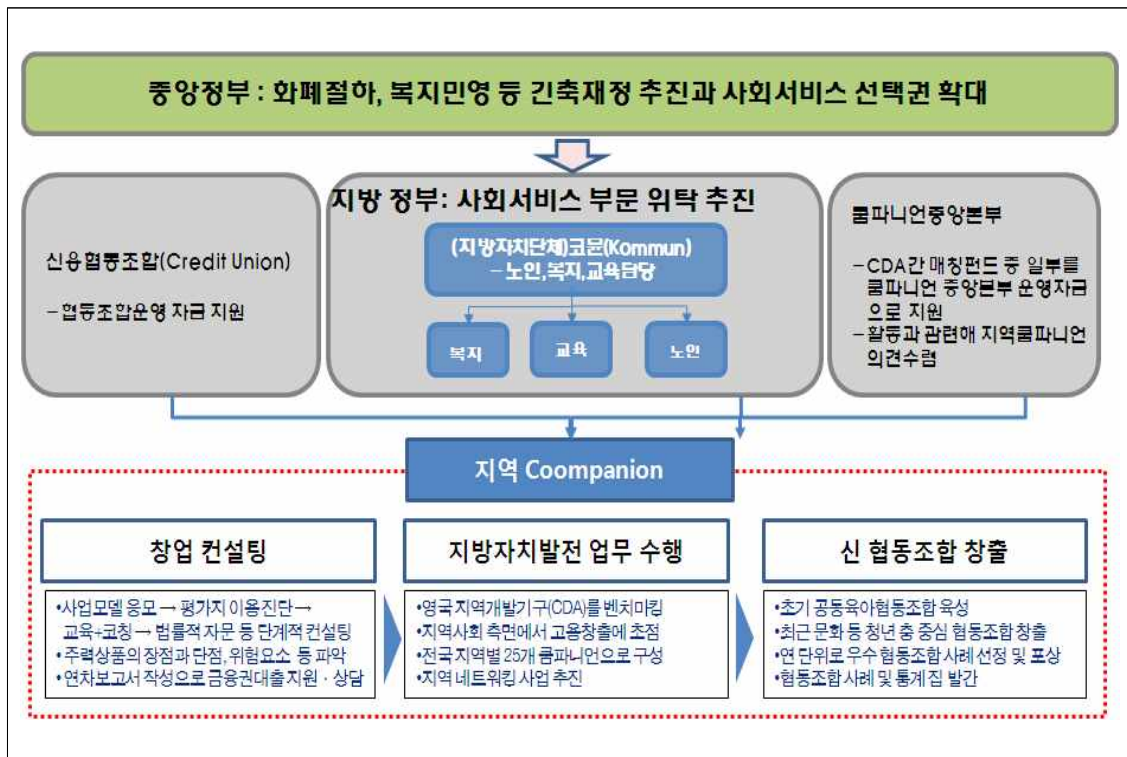
<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 >

구 분	주요 내용
육성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주도 비영리형 (사회적 협동조합) - 재활시장의 틈새전략 모델 ·재활부문 활성화(공공지원) 및 공공서비스 보조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- 비공공 부문에 사회적 기업 개방 ·노동통합사회적 기업=사회적 협동조합 ·정신건강 및 고용복지기관 대행 ·고용시장 프로그램 대행 - 사회적 기업에 관한 특정 법인형태 부재로 법인형태로 협동조합 사용 ·노동자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커뮤니티 기업 모델을 채택(B2B 사업방식)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동조합 > 사회적 기업 - (현황) 협동조합 40,000개(12) ·조합원 1만 3천명 6만 3천명 고용 ·사회적 협동조합 300-350개 ·여성고용률 40%(일반기업은 23%) - 사회적 기업 수 150개(07), 4,500명 고용
법/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부문 약화로 협동조합프로그램 실험(82) ·아동케어협동조합 출현(MS 10%) - 프로젝트 재원 및 프로젝트 공모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증가(90) - 정신보건개혁(80후반)으로 재활부분 재정지원
지원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프로젝트 발주 및 공모지원 방식 -고용복지프로그램인 국가위크숍시스템 샘홀(Samhall)의 하청 ·제조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 일자리제공 ·사회기부가 미비

□ 지역형 협동조합 개발기관: 콤파니언(Co Companion)

- (특징) 중앙정부 주도하에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지역 개발기구를 벤치마킹한 콤파니언을 전국 지역별로 25개 설치·운영
 - (배경) 1986년~89년 정부가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는 협동조합개발기구 (CDA)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 후, 06년 전국적으로 콤파니언으로 개명
 - (조직) 200여개의 회원들로 구성된 각 지역별 콤파니언은 사무총장 1인에 7명의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계
 - (역할) 새로운 협동조합 개발과 사업모델에 대한 창업컨설팅, 지역개발관련 사업 등 3대 사업을 추진
 - (성과) 초기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복지, 양노원 등을 거쳐 최근 문화·주택관련 협동조합 등 연간 약 120개의 협동조합을 개발
 - (지원) 운영자금 50%는 지방정부와 경제개발부 TVV 산하 정부기관으로부터 조달되고, 나머지 50%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유료컨설팅으로 조달
⇒ 유료컨설팅의 경우 시간당 100유로이며, 대상기관 성격에 따라 차등화

<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생태계 조성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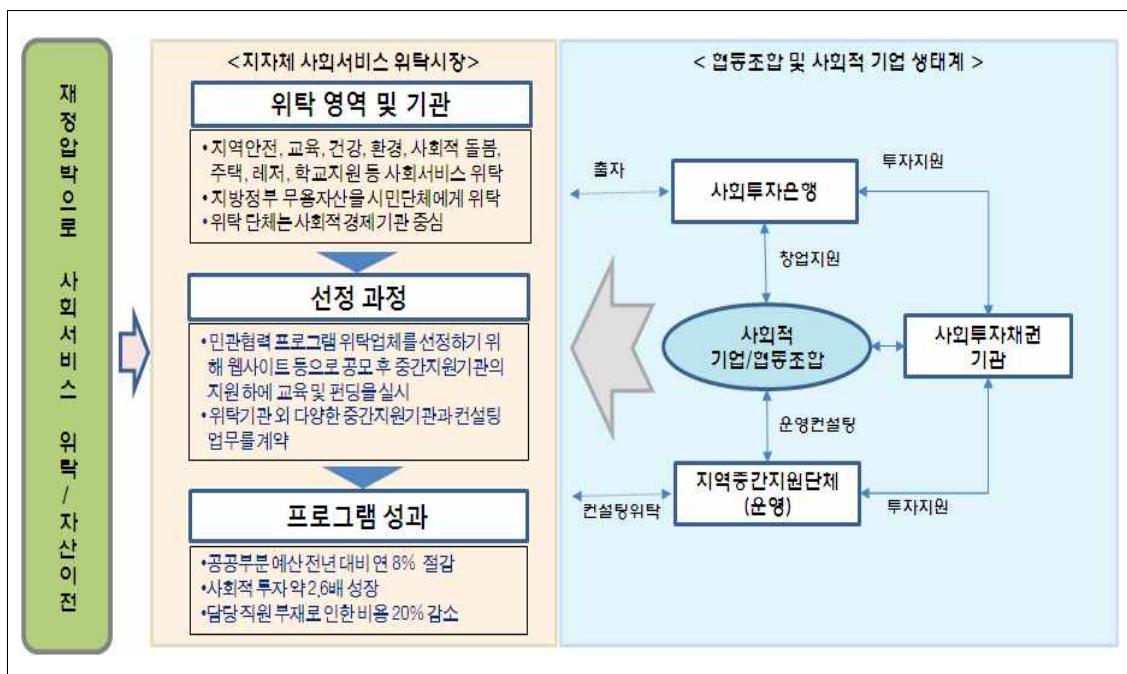


5. 영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델

□ 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

- (개관) 재정압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주도 공공부문서비스를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단체에게 위임하면서 생태계를 조성
 - (정책배경) '97년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복지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에게 위탁하기 시작
 - (정책특징) 사회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서 자산이전, 창업컨설팅, 자금지원 등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을 육성
 - (성공요인) 지역 중심의 공공사회서비스 중 지역개발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분사·개발
 - ⇒ 2009년 10개였던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2013년 120개로 확대
 - (생태계 조성)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(Social Investment Bank), 자산이전 전문 지원 기관 Locality,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Community Link 등 민간 중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

< 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과 생태계 조성 >



- (정책과정) 재개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개발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게는 법적 지위를, 경영자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
 - (제도개정) 지역사회개발 투자유치를 위해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등 보증유한회사의 한계를 철폐하고, 경영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보장하는 공동체이익회사법을 개정
 - (지원정책) 지역단위의 협동조합개발기구(CDA) 설치와 기금조성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, 세금우대 등을 실시
 - (성과) 약 5,400여개의 협동조합 대비 비영리기관, 상호조합, 영리기업등 사회적 기업이 62,000여개 생성

< 영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 >

구 분	주요 내용
육성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개발 중심형 (소비자 협동조합) - 상법상 기업육성 모델 ·설립운영 중심 간접지원방식(기업가) ·지역개발 중심. 관리자 이익제공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개발 투자유치에 초점 ·지역 NPO에게 상업상 지위부여, 주식발행 기능을 통해 보증유한회사의 한계극복 ·지역개발금융기관, 자선조직재원조달 - 사회적기업인 노동통합형(WISE)기업의 유형 ·지역사회협동조합(CSC), 지역공동체기업(CE), 중간 노동시장조직(ILMO), 사회적 회사(SF), 개발트러스트(DT), 지역공동체이익회사(CIC)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 기업 > 협동조합 - (사회적기업) 62,000여개('10) ·전체 고용의 5%, GDP 대비 2%, 매출액 약 61조원, 종사자수 50만 명 - (공동체이익회사(CIC)) 1,122개('09) ·개인 및 사회서비스 35%, 교육 19%, 부동산 17%, 보건사회복지15%
법/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공적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략('02) - 2006년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- 회사법(Companies ACT)(85) ·산업공제조합(IPS) 지위 부여 - 공동체이익 회사법(CIC)('05) ·지역 NPO에게 상법상 지위부여 - 회사법, 우애조합법, 자선사업법 등
지원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재정) 세금우대, 자금조달지원 ·(세금우대) 회원출자, 지역기업투자 유치 ·(투자유치)은행 및 협동조합개발기구(CDA)의 다양한 기금(형성지원금, 훈련지원금, 운영지원금, 고용지원금, 자본지원금, 회계원조지원금, 기업대부기금) - (사업) 정보제공, 컨설팅, 공공수주 프로그램 등

□ 자산이전 전문 중간지원기관 로컬리티(Local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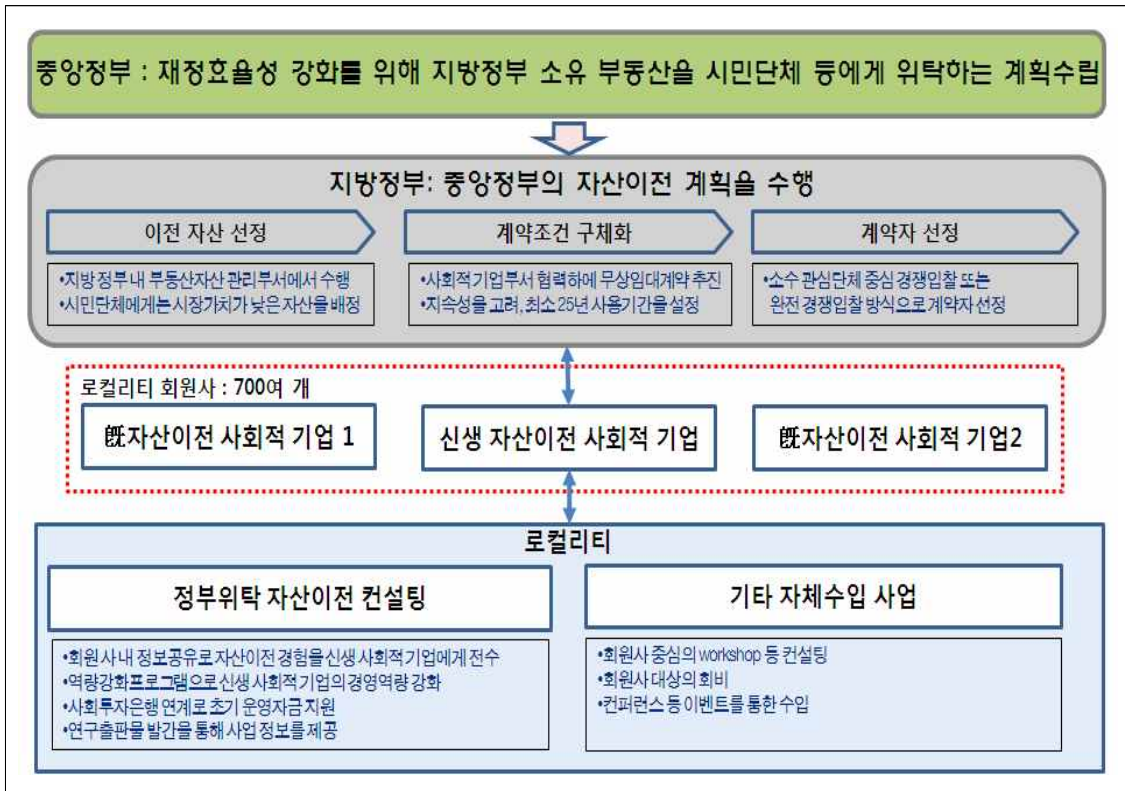
- (특징) 정부의 자산이전 정책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

·(정책배경) '97년 영국정부는 공공자산의 운영비 절감과 지역사회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상태인 지방정부의 건물 등 부동산을 시민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자산이전 정책을 추진

·(성공요인) 시민단체인 Bassac과 DTA가 합병한(11) 로컬리티는 중간지원기관 직원대상의 역량강화훈련 프로그램에 집중 중, 회원사 중 자산이전 경험이 있는 회원사 중심 Peer to Peer 정보공유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

·(사업성과) 자산이전 컨설팅외 경영컨설팅,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,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회원사인 사회적 기업이 700여개에 이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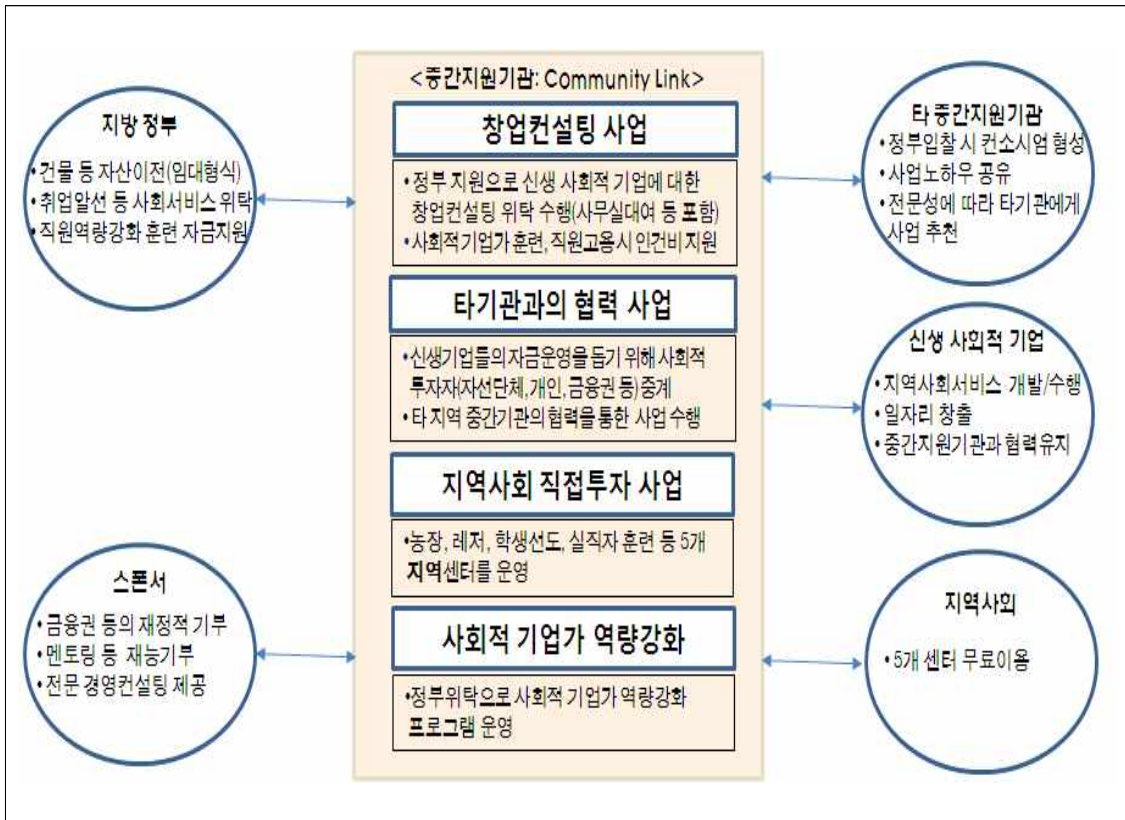
< 자산이전 전문 지원기관 Locality의 사업 모델 >



□ 지역사회 서비스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커뮤니티 링크(Community Link)

- (특징) 정부 공공서비스의 위탁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신생 사회적 기업의 창업 컨설팅 수주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업체제 구축으로 급성장
 - (정책배경)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서비스 위탁정책에서 수행기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
 - (성공요인) 정부로부터 건물에 대한 자산이전을 받아 서비스 공간을 구축 후, 창업컨설팅 위탁사업과 지역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, 사회적 기업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
 - (성과) 약 40년 전 낙후된 향만부두지역에서 버스구매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후, 2013년 약 40여개 프로젝트와 3개의 정부캠페인을 수행하며, 약 2만 여명의 지역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으로 성장

< 지역사회 서비스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Community Link의 사업 모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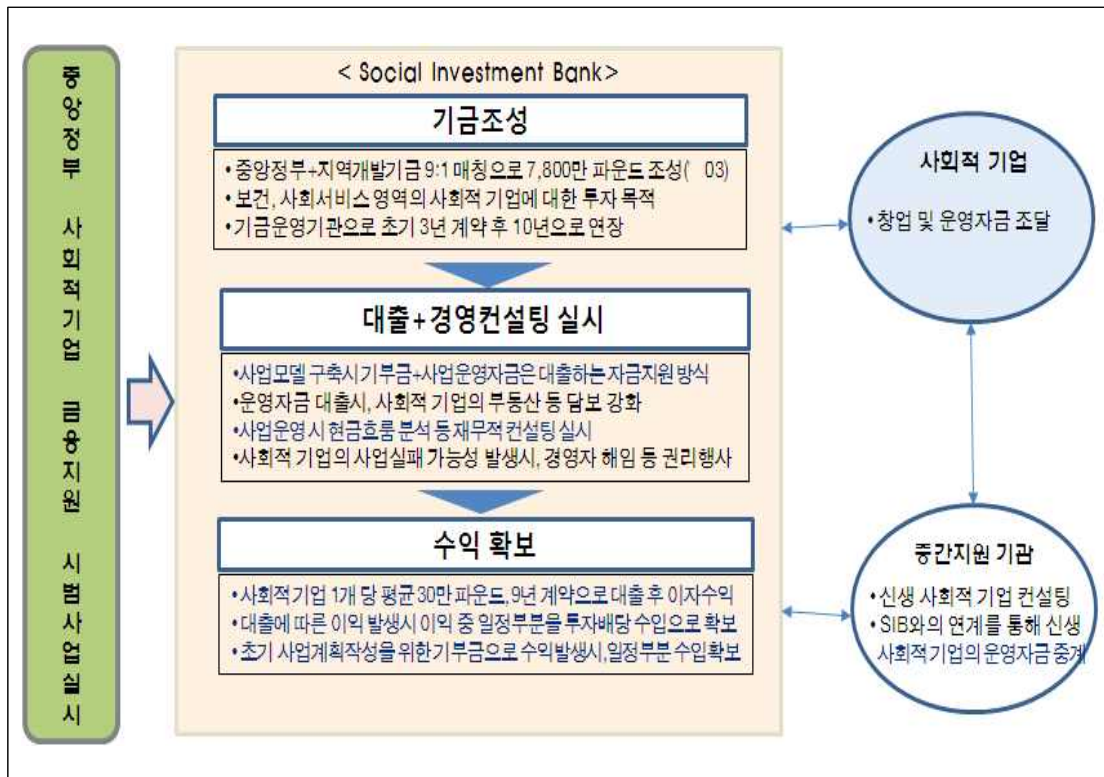


□ 운영자금 지원기관 사회투자은행(Social Investment Bank)

- (특징)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운영권을 확보 후, 대출을 포함한 밀착형 투자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 대표 금융기관으로 부상

- (정책배경) 노동당정권은 사회서비스 위탁기관들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7,800만 파운드의 기금(adventure Capital fund)을 조성하여 SIB에게 위탁
⇒ 7,800만 달러 기금은 10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SIB에게 기부하는 조건
- (성공요인) 초기 사업모델 구축 시 1만 파운드 기부금 제공, 사업운영 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출조건과 투자전략 컨설팅 등 밀착형 재무컨설팅, 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가동
- (사업성과) 2013년 초기 7,800만 파운드의 기금 외 정부로부터 타 프로젝트 기금 3억 2천만 파운드를 위탁받아 총 4억 파운드, 6개 펀드를 운영 중

< 운영자금 지원기관 Social Investment Bank의 사업모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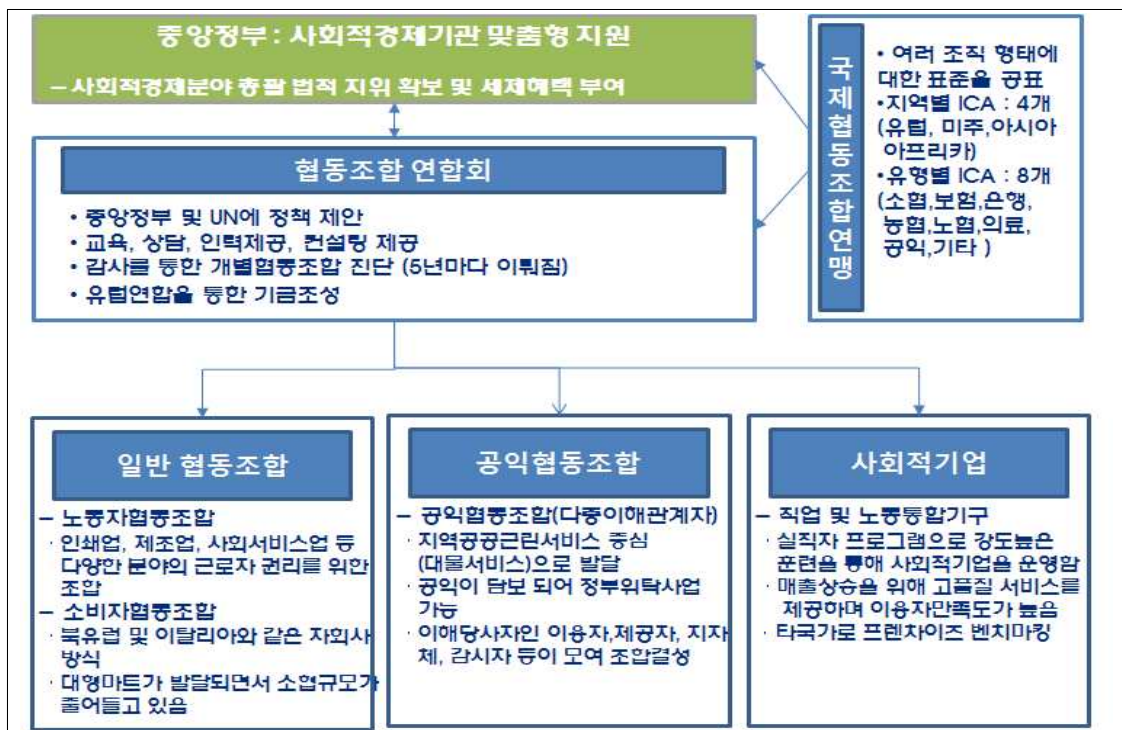


6.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델

□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

- (개관) 일반협동조합, 공익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상위법 제정으로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
 - (기존정책) 사회적 경제 주체 중 일반협동조합은 시장 내 일반기업과의 경쟁을, 사회적기업은 고용정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,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의 근린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차별화 육성전략을 추진
 - (성공요인) 프랑스 내 사회적 경제 각 주체들의 연합체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공조체계를 구축
 - (최근동향) 경제적 주체로써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공과 영리시장 외에 사회적 경제영역을 보장받고자하는 움직임이 대두

< 프랑스 사회적 경제 정책과 생태계 >



- (정책과정) 일반협동조합 육성 후, 사회적 기업, 공익협동조합 활성화 등 단계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

- (제도개정) 금융, 소상공인 등 일반협동조합이 활성화된 후, 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반소외법('98), 지역사회 근린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익협동조합법('01)을 제정하고 정부내 사회연대통합부를 설치
- (지원정책)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, 공익협동조합에게는 지자체 출자가능 및 근린서비스 사업위탁 등을 제공
- (사업성과) 약 10만 여개의 일반협동조합 대비 사회적기업은 약 25,000개, 공익협동조합은 약 200여개 생성
- (한계점) 돌봄 등 대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금급여 확대와 사회서비스 지출 증가로 타 국가대비 돌봄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

<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정책 개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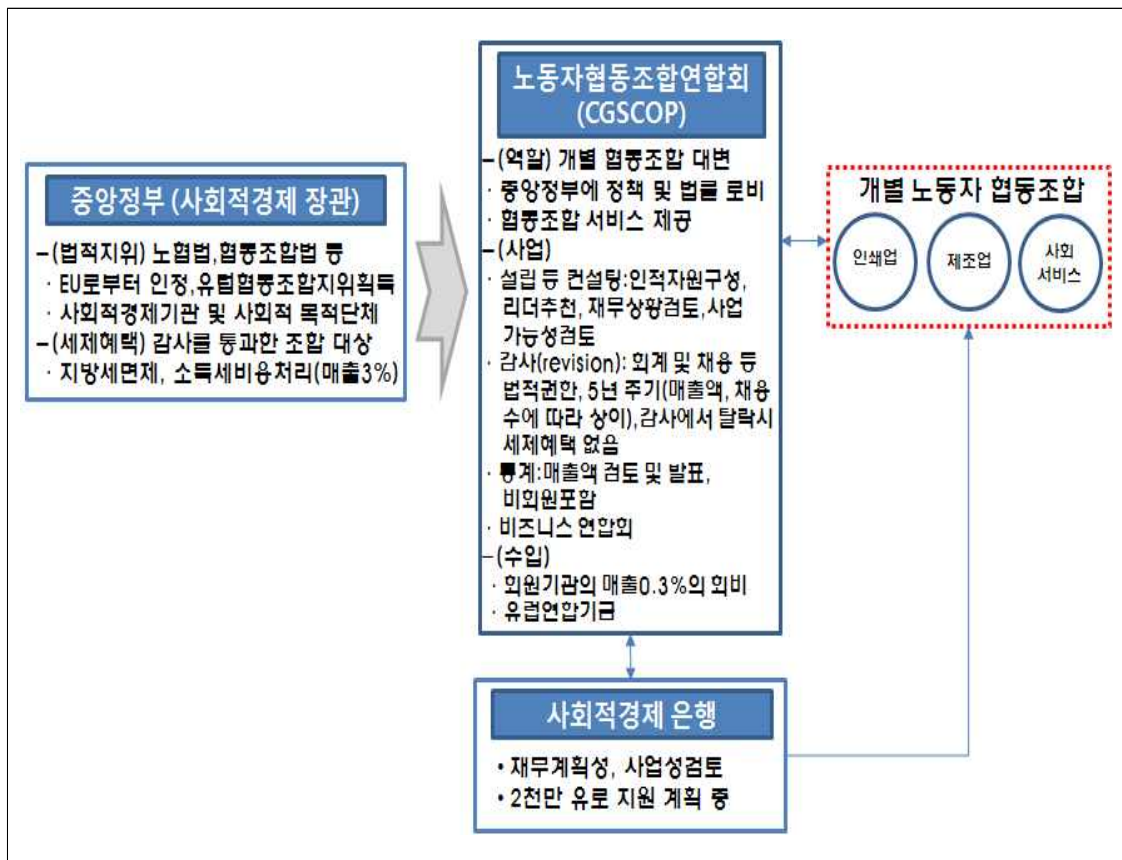
구 분	프랑스
육성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주도 영리형 (소기업가/근로자 협동조합) - 사회적 연대 경제 ·소기업가 협동조합 주도 ·고용전략: 취약자직업훈련·고용지원(근로자)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NPO 자격 ·직업훈련과 지역사회 서비스 2원화 - 사회적 배제 예방과 극복 수단 - 민간단체 지원 大 -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고용지원센터(CAVA),노동통합기업(EI), 임시직노동통합기업(ETTI), 노동중계협회(AI), 근린기업(RQ), 고용주단체(GEIQ), 대안통합기업(IE) 등 7가지 종류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 기업 < 협동조합 - (사회적 기업) 25,000개('10), 38,000개 일자리제공 - (협동조합) 기업, 소비자 노동자 등 총 95,850개, 직원 64.3만명 ·공익협동조합은 190개
법/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반소외법('98) 제정 ·노동법전에 사회적기업 형태(영리/비영리, 협동조합 등) 규정 -공동체이익협동조합법('01) ·SCIC(공동체이익협동조합): 조직목적 따라 협동조합 전환 기관 -경제이니셔티브법('03) ·영세기업 사회적 경제를 단일부처로 통합
지원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재정지원) 세제 지원, 재정 지원 ·사회보험 가족수당 보험료 면제 ·고용부속계약('05): 직업훈련 프로그램 최저시급(95%) 재정보조금지원 사회보장분담액 지원 - (사업지원) 고용, 직업훈련 중심 ·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파트너십 운영 ·서비스 바우처 제도(가사노동, 조경, 쇼핑, 육아, 노인복지, 학습지원 등)로 4,500개, 공인서비스 제공기관과 30만명이 존재

□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(CGSCOP)

- (특징) 정부 대상 로비단체로서의 역할과 연합회 산하 협동조합들의 창업 및 운영컨설팅 역할을 담당

- (자금지원) 협동조합관련 통계자료 작성 역할을 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별 지원금을 확보하고, 연합회 회원조직들의 매출액의 0.3%를 회비로 하여 운영
- (성공요인) 전문적 법률과 회계자문 등 창업 및 경영컨설팅 실시와 더불어 정부의 협동조합 실사 역할을 담당
- (사업성과) 2,000개 회원 노동자협동조합, 4만5천명 조합원 유지, 연 50억 유로의 수익을 달성

<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의 사업모델 >



□ 돌봄관련 사회적 기업 에스오에스그룹(Group SOS)

- (특징)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후, M&A를 이용한 사업확장과 규모화, 경영 전문가 영입을 통해 종합 돌봄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

·(설립배경) 84년 설립 후 정부지원 하에 약물중독치료 사업을 시작으로 돌봄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정규직원 1만 명, 자회사 300개, 연매출 7억 5천만 달러, 이용자 100만 명의 거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

·(서비스 대상) 아동 및 청소년, 노숙자, 노인, 실업자 대상의 돌봄 및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되 시설기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

⇒ 취약계층 대상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되 소득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부과 되는 차별 서비스 체계를 구축

·(성공요인) 회계, 인사, 상담,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(약 200명) 구축, 사업 확대를 전문 M&A 조직(CDI) 운영, 사회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영 등 전문 경영기반의 사업 확장을 도모

< 사회적기업 GROUP SOS 운영 모델 >



7. 한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

- (시장정책) 일반협동조합의 경우, 시장경제에서의 차별성 철폐를,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시장 위탁을 적극적으로 고려
 - 최근 설립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들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한 조건부여가 필요
 - ⇒ 해외 3개국의 일반협동조합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의 특혜는 오히려 불공정 경쟁 유발소지가 존재
 - ⇒ 현재 설립되고 일반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일반 중소기업과 경쟁가능하도록 중소기업지원방안 적용대상 포함은 추진
 -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, 사업목적이 공공인경우가 많음으로 선진국들의 정책을 고려 시, 국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달기관으로서 자격부여는 필요
- (중간지원)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지원 기관보다는 민간 주도의 지원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실행이 요구됨
 - 민간주도의 중간지원기관 육성 시,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
 - 정부는 현 정부주도의 육성보다는 영국의 자산이전과 사회적 기업 창업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고려하여 경쟁기반의 지원기관 육성방안을 고려할만함
 - 단, 현재의 민간 중간지원기관들의 인력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영국정부의 중간지원기관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
- (금융지원) 인건비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운영자금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운영방식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 - 인건비 지원 중심의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선진국 사례를 고려 시, 금융지원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이 아닌 운영자금조달에 있음
 - 우선 프랑스의 신탁과 같이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
 - 만약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영국의 사회투자은행(SIB)과 같이 기금 조성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한해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시스템도 고려
 - 단, 운영자금 대출시 협동조합들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컨설팅 및 자금운영 등 재무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관설계가 요구됨